

미국은 지금

미국산 국방용 드론 수출길 확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US Equity Analyst 조민주 mj3346@kiwoom.com



Issue Brief

美 국무부, 첨단 국방용 드론 수출 요건 완화 개혁 승인

9/15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4/9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속도와 책임 향상을 위한 해외 방위 판매 개혁’이라는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무인 항공 시스템(UAS) 관련 수출 정책 개정안을 승인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의 경우, 첨단 드론 및 미사일 기술력 향상 뿐 아니라 가벼운 수출 제한 규제 덕분에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최근 차세대 첨단 무인 항공기 기술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돌입하고 있지만, **수출 규제로 인해 국제적인 경쟁 및 입지 확장 능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현재 유럽, 태평양, 중동 지역 내 동맹국들이 첨단 무인 항공 시스템 기술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고, 수출 확대를 통해 미국산 방위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동맹국의 보안 및 테러 대응 역량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 관련 기술 보유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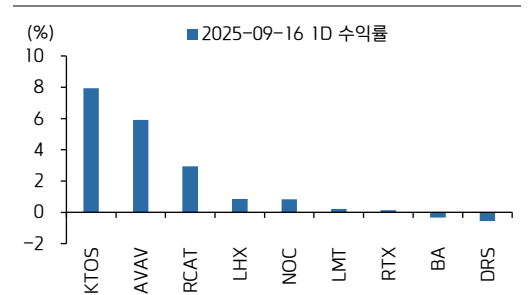
정책안에서 개정된 사항은 바로 수출 허가 및 절차의 간소화다. 기존에 국방용 무인 항공 시스템은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하에 미사일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MTCR은 1987년 제정된 다국적 협약으로 장거리 미사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술력을 가진 무기 체제의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무장이 가능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중대형 군사용 무인 항공기의 경우, MTCR의 ‘거절을 기본 전제로 한 심사’에 적용되어 과거 해외 수출 허가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비우호국에서의 활용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적 책임이 따랐기에 기업들도 해당 규제안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용 무인 항공 시스템이 MTCR에서 제외되고, 일반적인 유인 전투기와 유사한 수출 절차가 적용되었다. 물론 수입국과의 신뢰성과 협력 가능성 고려는 필수적 전제이나, **기존 수출 규제의 기준이 속도, 높이 등과 같은 기술적 사양이었다면, 이번 개정은 책임 구조를 바꿔 국무부, 국방부, 의회에게 수출 검토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유연성을 증대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기술 사양이 수출 허가의 조건이 아니라 정책, 외교적 고려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동맹국향 수출 진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지난 5월 트럼프가 성사시켰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420억달러 규모 방위 계약에서도 이제 첨단 국방용 무인 항공 시스템이 포함 가능해졌으며, General Atomics의 MQ-9 판매가 시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용 드론 수출 요건 완화 개혁안

구분	기존 MTCR 기준	유인 전투기 기준
심사 기준	기술적 사양 (사거리 ≥ 300 km, 페이로드 ≥ 500 kg)	정책·외교·안보 평가 포함 + 기술·능력
심사 주체	국무부 DDTC/BIS	국방부 주도(FMS/DSCA) + 국무부 협의
의회 통보	일부 Category 1 예외	유인 전투기와 동일, 패키지 판매 포함 시 의회 통보 필수
승인 가능성	MTCR	동맹국에 대해 조건부 허가 가능성 높음
수출 범위	기술적 안전성·위험성 기준	전략적·외교적 우선순위 국가 중심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키움증권 리서치

발표 직후 관련 기업들 ID 수익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2025-09-16 기준

트럼프 행정부는 드론 지배력 확보에 진심

Make America Great Again 을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금과 같은 역동적인 글로벌 지정학 변화는 방위 예산 확대와 직결될 수 밖에 없으며, 기술적으로 가장 강하고 진보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동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즉 해외 수출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미국 본토 국방 예산 의존도가 높았던 방위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 수요 증가가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상용 드론이 전장에서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됨에 따라 이를 탐지 및 무력화하는 대드론 방어 중요성 높아**지는 만큼 **드론 관련 차세대 방산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드론 대응을 위한 레이저 무기 프로그램, 골든돔 프로젝트를 포함한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전략 2040' 등 관련된 추가 모멘텀 재료들 추후 발표될 예정이므로 기대감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다.

국방용 드론 수출 요건 완화 개혁안

구분	기존 MTCR 기준	국방부 유인 전투기 기준
심사 기준	기술적 사양 (사거리 ≥ 300 km, 페이로드 ≥ 500 kg)	정책·외교·안보 평가 포함 + 기술·능력
심사 주체	국무부 DDTC/BIS	국방부 주도(FMS/DSCA) + 국무부 협의
의회 통보	일부 Category 1 예외	유인 전투기와 동일, 패키지 판매 포함 시 의회 통보 필수
승인 가능성	MTCR	동맹국에 대해 조건부 허가 가능성 높음
수출 범위	기술적 안전성·위험성 기준	전략적·외교적 우선순위 국가 중심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키움증권 리서치

MTCR 이행 가이드라인

구분	세부 내용
Category I	- 사거리 ≥ 300km, 탑재 중량 ≥ 500kg 이상인 미사일, 로켓, UAV 등 - 거절을 기본 전제로 한 심사(strong presumption of denial)가 기본 원칙 -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적 최고 정치 수준에서 승인 가능
Category II	- 성능이 더 낮거나, 일부 부품/기술(엔진, 추진제, 제어장치 등) - 원칙적으로는 허가 가능성이 높지만, 군사적 전용 위험이 있는 경우 제한
평가 요소	- 수입국의 WMD 개발 여부, 국제조약 준수 여부(NPT, CWC 등), 수입 목적의 신뢰성 - 기술 전용 위험(diversion risk) - 수입국의 정책 투명성 및 미국/회원국과의 협력 정도
회원국 의무	- 각국은 자국 법령을 통해 MTCR 가이드라인을 구현 - 수출 신청 시 반드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사 - 회원국 간 정보 공유(의심 사례, 불허 사례 등)

자료: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